

재난의 사이클

김성철

우리나라도 재난이 적잖은 나라이다. 홍수, 태풍, 가뭄으로 인한 자연 재해는 생활이 어려웠던 시절에 삶을 더욱 고단하게 만들었다. 산업화와 경제 발전, 그리고 민주화 과정 속에서도 재난은 끊이지 않았다. 압축 성장을 하며 달려온 결과, 재난의 성격에서도 자연적 요소에 인적·사회적 요소가 덧붙게 되었다. 민주화는 인권뿐만 아니라 제도적 신장을 일으키므로 재난 대비도 강화되어 인간의 생명과 재산이 헛되이 사라져서는 안 되었다. 그러나 실재는 그렇지 않았다. 삼풍백화점 붕괴, 성수대교 붕괴, 서해 페리호 침몰 사고, 대구 지하철 화재 사고, 허베이 스피리트호 오염 사고 등 인적·사회적 재난이 줄을 이어 발생했고, 세월호 참사로 안전 관리 체계의 허점뿐만 아니라 우리 사회의 모순이 총체적으로 드러났다.

일반적인 재난 연구와 달리, 이 책은 재난을 ‘평화인문학’의 맥락에서 다

룬다.¹ 좀 더 구체적으로는 재난이 왜, 그리고 어떻게 평화의 반대편에 서게 되는가를 탐구함으로써 재난의 폐허 위에 평화를 회복할 수 있는 방안을 모색하는 데 궁극적인 목적이 있다. 이 책은 재난의 기원과 과정에 관한 인문학적 및 사회과학적 개념을 논의하는 두 개의 장을 비롯하여, 다양한 관점과 사례를 다루는 일곱 개의 장으로 구성되어 있다. 고도화된 과학 기술 문명 사회는 그런 사회대로, 그리고 체제의 속성 때문에 취약한 거버넌스를 지닌 사회는 그런 사회대로, 재난의 과정을 제때 제어할 능력을 발휘하지 못하는 경우가 많다. 재난을 후진국형 현상으로만 보는 것은 잘못이다.

재난의 과정은 일종의 사이클이다. 세월호를 포함한 모든 재난은 일정한 과정을 거치게 마련인데, 마치 생명이나 자연 현상이 일정한 주기를 갖고 있는 것과 같다. 재난은 그것이 비롯되고 예견되다가 나중에는 기어이 발생하여, 물질 및 정신적 피해와 인간의 존엄성에 상처를 남기며, 더욱이 줄곧 고통스럽게 또는 사실과 달리 기억되는 과정을 거친다. 재난은 이런 층들이 하나씩 뚫리면서 복잡성을 더해 간다. 재난은 이 층들을 통과하는 동안 여러 차례 피할 수 있는 기회가 있다. 한 층에서라도 문제를 발견하고 잘 대처하면 재난을 막을 수도 있다.² 재난이 발생한 후라도 이를 신속, 공평하게 통제할 수 있다면 복합 재난이 아닌 단순 재난으로 끝날 것이다. 하지만 여러 가지 이유로 인간은 그 기회를 놓치고 만다.

이 서문은 재난이 비롯되고 발생하고 전개되며 재난이 기억되기까지의

1 평화인문학의 문제의식에 대해서는 서울대 평화인문학연구원 편, 『평화인문학이란 무엇인가』(아카넷, 2013), 특히 박명규의 서장 「지금 왜 평화인문학인가」 참조.

2 이재열은 이를 스위스 치즈 모델이라고 부른다. 「리스크 관리와 커뮤니케이션」, 《원자력문화》 제230호, 2014, 5쪽 참조.

모든 과정을 추적한다. 재난의 사이클을 이해함으로써 우리는 재난에서부터 평화로울 방도를 찾을 수 있기를 기대한다. 이 글은 각 장의 내용을 참고하여 재난의 사이클을 재구성한다.

기원

한국의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에 따르면, 재난은 국민의 생명, 신체, 재산과 국가에 피해를 주는 것이며 크게 자연 재난과 사회 재난으로 나뉜다. 자연 재난은 태풍, 홍수, 지진, 풍랑, 해일, 가뭄, 조수 등 다양한 자연 현상으로 발생하는 재난을 말한다. 그리고 사회 재난은 화재, 붕괴, 교통사고, 환경 오염 사고뿐만 아니라 감염병 및 가축 전염병의 확산까지를 포함하는 넓은 의미의 인적·사회 구조적 재난을 말한다. 기본법에 기초한다면, 자연 재난이 아닌 모든 것은 사회 재난에 해당된다.

이상과 같은 법이나 사회적 통념에 따른 재난의 정의와 구분은 인간과 자연을 대비시키고 피해 중심으로 보는 것이다. 하지만 어원상 재난은 인간과 자연을 함께 생각하는 개념이다.

한자의 뜻으로 볼 때 재난은 자연의 재앙[災]으로 인해 어려움[難]이 발생하는 상황이라고 할 수 있다. 영어 disaster는 그리스어 dis(잘못된)와 astro(별, 천체)에 기원을 두는 말로서, 잘못된 천체, 즉 자연의 부조화를 뜻한다. 자연의 부조화는 왜 발생하는가(이찬수, 이문영). 자연의 어떤 잘못된 상황 또는 부조화 상황에는 어떤 주체의 존재가 암시되어 있다. 그 주체를 종교적인 언어로 신이라 하기도 하고 인간 안에서 찾기도 한다. 특히 인간 안에 기원을 두는 재난은, 인간이 자연을 타자화 또는 탈자연화함으

로써 자연을 더욱더 자연적이지 않은 상황으로 변화시키는 데서 비롯된다.

자연으로 인한 다양한 현상, 즉 가뭄, 홍수, 해일, 지진 등에 의한 피해는 ‘재해’이지만 그 자체가 재난은 아니다. 이 같은 피해가 재난이 되는 상황은, 이미 인간이 그 피해를 더욱더 불가피하게 만들거나, 인간의 대응 방식으로 차별적 피해가 심각해지거나, 인간의 잘못으로 다른 재앙을 초래하는 경우이다. 즉 자연 재해가 인간에 의해 복합성을 띤 재난, 즉 복합 재난이 된다(김성철). 따라서 흔히 말하는 자연 재난에도 인적 요소를 포함하지 않은 것이 없다고 해야 할 것이다.

자연 현상에 인적 요소가 개입되면서 재난이 된다. 재난은 인간이 자연을 타자화하는 데서 비롯된다는 말이다. 인간에 의한 자연의 타자화는 무엇인가? 근본적으로 그것은 과학 기술을 동반한 인간의 문명이다. 문명은 인간으로 하여금 자연을 극복하거나 정복하려는 많은 도구와 수단을 만들어 내도록 했다. 문명은 특히 자연의 법칙에 대해 인간의 지능과 합리성을 기반으로 하여 계산 방식을 만들고 공유하게 했다. 중요한 문제는 계산 방식 자체보다는 그것이 정치에 의해 왜곡되고 편의에 맞게 해석되어 이용된다는 점이다. 계산 방식에 정치가 개입하는 대표적인 예로서 핵을 들 수 있다. 유럽의 물리학자들이 발견한 핵분열 원리가 제2차 세계 대전 중 미국의 핵무기 제조에 활용되었고 태평양 전쟁에서 사용되었다. 그 원리는 에너지로 이용되기 이전 10여 년 동안이나 미국과 소련 간의 핵무기 경쟁을 위해서만 사용되었다. 이른바 원자력의 평화적 이용도 냉전 시대의 산물이다. 미국과 소련은 각각의 동맹국들에 자신의 기술을 제한적으로 이전해 주었다. 핵무기가 이전의 무기와는 다른 차원에서 인류의 생존을 위협하는 것처럼, 원전으로 인한 사고 또한 끝을 가늠할 수 없는 재앙을 초래하는 중이다. 세계적으로 이미 대형 원전 사고는 세 차례나 발생했다.

이중 인명 피해가 없었던 스리마일 아일랜드 사고를 제외하더라도 1986년 체르노빌 사고와 2011년 후쿠시마 사고는 그 피해를 측정하기조차 힘들며 현재까지 진행형이다. 후쿠시마 사고 후 방사능 수치는 히로시마 원폭 이후보다 훨씬 웃도는 수치를 보인다(시미즈 나나코). 방사능이 새로운 세포가 형성되는 태아와 아동에게 더 치명적이라는 사실은 알려져 있지만, 피폭 기준치와 인체에 미치는 영향에 관해서는 다양한 해석이 제기된다. 이 해석에도 정치가 작용한다. 일본 정부는 후쿠시마 이전 연간 1밀리시버트 이하의 방사능 노출을 피해 기준으로 삼았지만, 사고 이후 5밀리시버트로 기준치를 올렸다.³ 정치가들은 무엇보다도 피난으로 인한 사회 정치적 혼란을 더 우려했을 것이다.

인간이 자연법칙을 터득하고 계산 방식을 만들었어도 이를 무시한 데서 재난이 기원하기도 한다. 세월호 사고에서 보듯이 배의 복원력의 원리와 평형수의 운용에 관한 규정이 있었으나 선박 회사와 선원들은 이를 무시했다.

결국 재난은 일견 외부에서 온 것으로 보이지만 인간에 의해 확대되고 복합화한다. 과학 기술 문명으로 첨단화된 사회는 재난에 훨씬 더 취약해졌다. 선진국과 후진국 사이에서는 재난의 성격만 다를 뿐, 둘 다 재난에 노출되어 있기는 마찬가지이다.

3 이에 대해 유엔 인권이사회의 특별보고관 아난드 그로버(Anand Grover)의 2013년 보고서는 이 같은 기준 상승이 건강권을 해친다고 보고, 일본 정부에 연간 기준량을 1밀리시버트로 다시 낮추라고 요구했다.

예견

인간은 예견력과 예측력을 가지고 있다. “어쩌면 무슨 일이 일어나고 말 거야”라는 직감부터 시작해서, 경험과 추리에 바탕을 둔 직관, 그리고 과학 기술 능력에 기초한 예측에 이르기까지 인간은 다양한 형태의 예견 능력을 소유하고 있다.

예를 들어 지진이 발생하기 전 자연에서 나타나는 여러 현상에 대한 경험 및 이를 분석한 자료를 바탕으로 지진을 감지할 수 있다. 1976년 중국의 탕산 대지진이 발생하기 전 베이징과 지방의 지진국 관리들은 지진을 예측하는 보고서를 제출하였다. 그러나 이는 정치적 이유에서 다 무시되고 말았다. 이와는 달리 탕산에서부터 115킬로미터 떨어진 칭룽시는 지진 발생 때 수십만 채의 가옥 피해를 보았지만 자체적으로 대비하여 사망자가 없는 ‘칭룽의 기적’을 만들었다(백지운). 그 당시의 과학 기술 수준으로 보아 오늘날과 같은 예측 능력이 있었을 리는 만무하지만 말이다.

만일 베이징의 공산당 지도부가 지진 예측 보고서를 받아들여 대비했다면 피해를 줄일 수 있었겠지만, 반대로 대비했는데도 예측이 맞지 않았다면 공산당은 신뢰를 잃었을지 모른다. 따라서 공산당 지도부의 선택은 그 같은 사실과 기록을 영원히 묻어 두는 것이었다. 그리스 신화에서 아폴론은 카산드라 공주와 사랑에 빠져 그에게 예지력을 주었으나 그녀가 거부하자 설득력을 잃는 저주를 내렸다. 베이징과 탕산의 지진국 전문가들은 카산드라였으나, 설득력을 가진 아폴론과 같은 베이징의 공산당 지도자들은 지진국 전문가들의 예측을 빌려다 쓰면 정치적으로 도박을 하게 되자 예측을 무시하는 선택을 했다. 그들은 정치적 실패를 감수하지 않기 위해 아예 그런 예측이 없었던 것처럼 만든 것이다.

과거의 경험에 비추어 본 예견도 있을 수 있다. 세월호 이전에도 한국은 성장에만 몰입한 채 안전을 소홀히 했다. 삼풍백화점 및 성수대교 붕괴, 서해 페리호 침몰, 대구 지하철 화재 등 많은 사고들은 세월호와 같은 참사를 암암리에 예견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다.

인간의 예견력이나 예측력에 한계도 있다. 인간은 개별적인 과정에서 위험을 종합적으로 인지하고 파악하는 데 한계를 지니고 있다. 사실 찰스 페로가 정상 사고를 말하면서 사고는 필연적이라고 결론지은 이유는, 위험은 잘 파악되지 않으며 재난의 가능성은 언제나 존재하기 때문이다. 실제로 인간은 복잡한 첨단 기술에서 사고가 발생할 가능성을 미리 발견하지 못한다. 더 중요한 것은 인간이 매우 낮은 확률을 무시한다는 점이다. 인간은 단순한 재해로 끝날 수 있는 사고들을 정상적·필연적인 재난으로 만드는 셈이다. 이런 맥락에서 보자면, 페로가 말하는 ‘정상’은 인류 문명이 아니라면, 즉 자연 상태라면 정상이 아니라는 역설적 의미를 지닐 것이다.

컨텍스트

사고나 재해가 재난으로 발전하는 컨텍스트가 있다. 재난에 이르는 컨텍스트로 먼저 관행을 지적하지 않을 수 없다. 흔히 관행은 일상이며 문화라는 이름으로 정당화되기도 한다. 그러나 관행의 주체는 과정의 정당성과 결과에 대한 책임에 대해 생각하지 않는다. 도덕적인 판단이 없는 관행은 오랜 기간 동안 사회 성원들이 인정하는 관습과는 다르다. 관행은 지켜야 할 제도와 규칙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지나치는 일을 되풀이한다. 관행으로 인해 그 제도와 규칙은 유명무실해지며, 이를 지키는 것이 오히려 겁

연쩍고 부끄럽게 된다.

관행은 한나 아렌트가 말하는 “사고(思考)의 무능력”에서 출발한다. 아렌트가 말하는 사고의 무능력은 홀로코스트 집행자들이 상대의 미래에 대해 아무런 상상도 하지 못했음을 또는 았았음을 의미한다. 직접적 폭력이 아닌 재난에서도, 결과에 대한 상상력의 부재로 인해 다른 사람들에게 돌이킬 수 없는 상황을 초래할 수 있다. 사고의 무능력은 단순한 감수성 부족에서 비롯되기도 하고 비도덕적 타협의 결과로 나타나기도 한다. 관행은 이미 제도와 규칙을 무너뜨린 행위이므로 내부 고발자의 노력이 있다 해도 쉽게 시정되지 않는다. 오히려 관행을 사회 구조적으로 용인되거나 이를 보호하는 상위의 행위 주체가 존재한다.

세월호의 경우에도 선박의 안전 운항을 크게 위협하는 문제, 즉 배의 복원력을 해치는 증축, 개조에 대해 한국선급은 적합 판정을 내렸다. 심각한 복원력 문제를 안고 있던 세월호는 화물 과다 적재와 결박 부실로 이미 출항 때부터 재난 가능성을 안고 있었다. 이 같은 사실에도 불구하고 안전 점검을 생략한 채 인천항 출항을 허가한 해운조합은 재앙을 재촉하는 주체였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다.

선박 소유주와 선장에게는 부당한 개조 지시와 과다 적재가 관행이었으며, 이들에게 승객의 생명과 직결되는 안전은 주요 관심 대상이 아니었다. 여기에는 사고의 무능력, 감수성의 결여, 그리고 무엇보다도 도덕적 공백이 있었다. 관행은 비도덕적이면서, 도덕을 의도적으로 무시하기도 한다. 관행의 주체들은 그것을 일상으로 여기며, 이들에게 책임이라는 정신 공간은 존재하지 않는다.

중요한 것은 관행의 일상화가 방치되거나 비호된다는 점이다. 우리는 흔히 통제를 통해 인간의 삶을 억압하는 독재를 비판하고 문제 삼는다. 그

러면서 통제를 벗기는 것이 급선무이며 통제에서 벗어나면 인간이 자유롭고 평화로워질 것이라고 생각하는 경향이 있다. 그러나 통제에서 벗어난 상황이 반드시 자유와 평화인 것만은 아니다. 통제의 해체가 방치를 낳을 수 있으며, 방치는 인간이 자유롭지도 못한 비평화적 상황을 초래한다. 방치는 자유와 다르며 자율을 허용하는 제도나 규칙과도 다르다. 관행의 일상화를 방치하는 정치권력은 제도와 규칙에 저항하는 이들의 보호막이 된다. 설사 체제가 민주적이라 할지라도 정치권력이 관행을 방치하는 경우 자유와 평화를 보장할 수 없다. 이 점에서 체제의 종류와는 상관없이 관행은 재난 발생의 콘텍스트이다.

대응과 복구

재난 대응 거버넌스의 효율성에 따라 피해의 규모와 성격이 달라진다. 지금까지의 여러 층을 통과하여 사고가 발생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라 할지라도, 재난 대응 거버넌스가 잘 구축되어 있으면 재난은 그 자체로서 수습되고 피해는 복구될 것이다. 통치와는 달리 거버넌스는 위계적·관료적 통제에 의존하는 대신 권한의 분산과 이양을 강조한다. 거버넌스의 주체는 중앙 정부, 지방 정부, 시민 사회, 그리고 국제 사회(국제기구, 주변 국가, 국제 비정부 기구 등)이다. 거버넌스의 연결망은 유연성, 적응성에 초점을 맞추지만 결코 책임의 분산이나 책임의 회피를 의도하지는 않는다. 오히려 거버넌스의 성공은 현장에 관여하는 주체에 책임을 주고 연결망을 통해 다양한 자원을 동원하고 활용하는 권한을 부여할 때 가능하다. 재난 거버넌스는 재난 발생 지역의 재난 행정 책임자의 주관 아래 대응해야 한다.

거버넌스에서 비정부 기구는 유용성과 한계를 동시에 지니고 있다. 1999년 대만의 921지진에서 불교 지원 단체인 츠지가 보여 준 구조 활동이나, 2005년 미국 남동부를 강타한 카트리나 직후 종교 단체들의 구조 활동은 신속성, 기동성이 대처 요령이라는 측면에서 재난 거버넌스의 필수 요소이다(정유선). 또한 재난 대응에 시민 사회가 참여한다는 중요한 의미를 지니고 있다. 유의할 것은 비정부 기구와 시민 사회를 국가와 대척점으로 놓고 해석할 수 없다는 점이다. 시민 사회가 국가를 대신할 수 없고, 양자는 상호 구성적이며 특히 재난과 같은 상황에서 상호 보완적이다. 국제 비정부 기구가 대표성이 아직 취약한 나라의 재난에 인도적 지원을 제공하는 경우, 중앙이나 지방 정부의 제도를 건너뛰면 그 제도들이 더욱더 약화되고 만다. 새로운 국가를 건설 중인 나라들이 여기에 해당될 것이다.

재난 거버넌스에서는 제때(이른바 골든타임)에 대처하는 것이 결정적이다. 재난의 기로에서 거버넌스가 제때에 성공적으로 작동한 사례로는 2009년 1월 US에어웨이스 149편이 불시착할 때 소방 당국이 체계적으로 대응했던 일을 들 수 있다. 새 떼와 충돌하여 엔진 고장을 일으킨 항공기가 뉴욕 허드슨 강에 미끄러지면서 비상 착륙하게 되었다. 사고 후 일단 인근의 출퇴근용 여객선과 유람선 등이 접근해 구조 활동에 참여했지만, 보다 체계적인 구조는 해당 지역의 소방 당국이 주체가 되어 이루어졌다. 소방대와 경찰은 현장에 있던 민간 선박 여섯 대를 지휘 통제하면서 구조에 참여시키는 동시에 해안구조대에 경비선 지원을 요청했으며, 인근 여객선 터미널에 임시 지휘 본부를 설치하고 구조 후속 조치에 대비하였다. 항공기라는 교통수단의 사고였지만 구조의 책임 주체는 연방정부의 교통성이 아니라 현장 인근의 소방 당국이었으며, 소방 및 경찰, 해안경비대 등 공공 기관의 인적·물적 자원을 동원하는 권한을 행사했다. 더욱이

소방 당국은 구조 업무와 관계없는 민간 선박을 활용하고 승무원들과 승객들의 지원을 유도, 지휘하였다. 이로써 승객과 승무원 155명은 단 한 명의 피해도 없이 모두 구조되었고, 준비된 구급차에 실려 병원으로 호송되었다. 이 같은 현장 중심의 재난 거버넌스는 2001년 9·11 테러의 경험을 바탕으로 체계화되었다고 하는바, 불과 30분 정도의 결정적 시간 동안 그 효용이 극대화되었다.

세월호의 경우는 달랐다. 해경은 구조의 주체로서 체계적인 인명 구조를 수행하지 못했다. 책임도 권한도 보여 주지 못했으며 가용 자원에 대한 지휘 통제 능력이 없었다. 그러나 실패의 이면에는 제때에 대응할 거버넌스가 사실상 존재하지 않았음을 알 수 있다. 거버넌스는 재난 관련 법이나 기구만으로 완성되는 것이 아니다. 우리나라에도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이 있으며, 재난 발생시 행정안전부에 범부처가 참여하는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가 구성되어 운영된다. 법과 중앙 기구보다는 현장의 관련 기구가 책임과 권한을 지니고 모든 가용 자원을 지휘, 통제할 수 있어야 한다. 또 법과 기구가 실제 효율적으로 작동하기 위해서는 현장 대응 훈련과 연습도 충분히 이루어져야 한다.

세월호 사고 이후 제때에 대응하지 못한 책임과 권한의 문제, 이른바 컨트롤 타워의 부재에 대한 비판이 있었다. 이에 대해 정부는 재난안전처라는 기구를 새로 설립해 소방 방재, 교통안전 등의 컨트롤 타워 지위를 부여하고 있다. 그러나 중앙 정부의 총괄적 재난 대응 기구의 설치보다 더 중요한 것은 현장 대응을 위한 거버넌스 구축이다. 다시 말해 중앙 집중식의 위계적 지휘 통제의 제도화보다 중요한 것은 현장 대응에 대한 책임과 권한 부여, 가용 인적 및 물적 자원 능력의 제고를 위한 제도 및 규범의 확립이다.

대응, 복구와 관련하여 또 하나 중요한 것은 정치가 작용한다는 점이다. 이른바 ‘재난의 정치학’으로 인해 하나의 재난이 단순 재난으로 끝나지 않고 복합 재난으로 발전한다. 정치 체제가 중요한 변수가 되기도 하는데, 집권자가 국가 주권자로서 구조적 폭력을 행사하는 경우 더욱 두드러진다. 이는 마치 국가 폭력과 같은 직접적 폭력의 양상이 체제와 밀접하게 연관되어 있는 것과 같다. 재난에서도 자국민을 스스로 보호할 의지와 능력이 없는 체제, 이른바 보호 책임을 지지 않는 체제는 재난 상황에서도 무책임할 뿐만 아니라 주권 행사를 통해 국제적 인도주의 지원을 봉쇄하거나 제한한다. 이런 배경 속에서 북한의 경우도 1990년대 중반의 자연 재해가 기아라는 재난으로 발전했다. 북한은 식량난과 이에 따른 기아에도 불구하고 당국이 외부의 지원을 통제하려 했고 감시 체제를 무용화하기도 했다. 그럼에도 기아는 식량 분배 등 통제 경제의 골간을 붕괴시키고 비공식적 시장을 발전시킴으로써, 재난이 체제의 속성을 변화시키는 결과를 낳았다(김병로). 이 과정에서 사회적 불평등 구조는 더욱 심화되었는데, 북한의 기아는 이런 점에서 복합 재난이다.

차별과 배제는 재난 때 더욱 극명하게 드러난다. 즉 재난 피해의 불평등 또는 재난 부정의(*injustice in disaster*)는 이미 배태되어 있다는 말이다(김성철). 로버트 머틴이 재난이라는 극도로 열악한 상황에서 사회 현상 및 인간 관계가 더욱 극명하게 드러난다는 점을 갈파했듯이, 사회적 취약 계층, 즉 노약자, 아동, 여성, 장애인뿐만 아니라 빈곤 계층, 소수 인종 등이 재난 거버넌스에서부터 일찌감치 배제되기 마련이다. 이들 집단은 재난 발생으로 더욱 희소해진 자원과 수단에 접근하기 어려워진다. 동일한 재난이라도 차별적 자원 배분 또는 국제기구의 접근 불가능 때문에 사회적 불평등 구조가 더욱 심화된다. 내란이 있는 경우 더욱 그렇다. 서로 경쟁하는 주권

중에서 약한 쪽, 특히 국제적으로 인정받지 못하는 쪽은 흔히 국제적 인도주의 지원에서 배제된다. 유엔 기구뿐만 아니라 비정부 기구들은 국가주권이라는 장벽을 쉽게 넘을 수 없다.

스리랑카 사례는 재난이 평화의 기회였음에도 불구하고⁴ 차별과 배제의 정치 때문에 무력 갈등으로 종식된 경우이다. 쓰나미가 스리랑카를 강타한 2004년 당시는 신할라 인 주도의 스리랑카 정부와 타밀 LTTE 간의 주권 경쟁이 2002년부터 이뤄진 휴전 협상에 의해 잠시 주춤하던 때였다. 재난 속에서 신할라 세력은 민족주의를 내세워 타밀 쪽의 인도주의적 협상 제안을 거부하거나 무력화하였다. 국제 사회의 압력으로 인해 스리랑카 당국과 LTTE 사이에 설립된 인도주의 재난 관련 기구인 P-TOMS조차 신할라 인에 의해 무력화되었다. 막 씩이 튼 화해 협력과 인도주의적 기회를 신할라 민족주의는 거부하였다. 신할라 인은 스리랑카 내에서 독점적 권력을 추구하였다(주드 랄 페르난도). 이는 재난 속에서 피어날 수 있는 협력 정신과 공동체 의식에 정면으로 대치되는 차별과 배제였다.

차별과 배제는 민주-비민주, 또는 선진-후진의 문제가 아니다. 민주적이며 선진국인 경우에도 이 같은 재난 부정의에서부터 자유롭지 못하다. 2005년 미국의 카트리나 대응 과정에서 드러난 흑백 차별은 민주 국가도 예외가 아님을 여실히 보여 준다.

재난 정의라는 용어는 아직 없다. 하지만 환경과 관련한 편익과 비용을 둘러싼 불균형 문제를 다루는 환경 정의가 있듯이, 재난 시 발생하는 피해를 둘러싼 불균형에 대한 문제의식이 필요하다고 하겠다. 근원적인 문제

4 재난 상황에서 갈등하는 세력들 사이에 인도주의적 차원에서 화해가 이루어지는 다른 사례도 있다. 예를 들어 2005년 10월 카시미르 지역에서 지진이 발생하자 인도와 파키스탄 군 당국이 공동 구조 활동을 전개해 화해 분위기가 이루어지기도 했다.

로 들어가 보자. 과학 기술의 진보와 산업화의 결과 이산화탄소 배출의 증가가 기후 변동에 미친 영향이 과학적으로 입증되고, 기후 변동이 자연 재해의 발생 요인이라는 사실이 밝혀지고 있다. 결국 인류 문명이 재난의 원인 제공자이다. 원인 제공의 주체와 피해자가 비대칭적이다. 주체인 선진국은 오늘날 자연 재해에 대체로 잘 대응하는 반면, 그렇지 못한 후진국들은 기후 변동에 따른 재난에 취약하다(송영훈).

한 사회 내에서도 불균형 문제는 발생한다. 후쿠시마 사고 후 다카하시 데쓰야는 “희생 시스템론”을 제기하였다. 이는 원전으로 전기를 생산하는 지역의 피해자와 전기를 소비하는 지역 주민 사이의 관계를 지적인 용어이다. 희생 시스템은 피해자들(후쿠시마 주민)의 생명, 건강, 일상, 존엄, 희망을 희생시킨 대가로 다른 이들(도쿄 주민)의 이익을 창출해 준다. 핵전쟁 방지국제회의사회가 지적한 바와 같이, 생성하는 세포가 방사능에 더욱 취약하기 때문에 후쿠시마 지역의 태아와 아동이 방사능의 가장 큰 피해자가 되고 있다. 이에 대한 정보가 은폐되기도 하고 무관심을 받기도 하며, 또 공동체 전체를 위해서 값진 희생으로 정당화되기도 한다. 피해 지역이 열악한 자원 때문에 원전을 수용했다는 점을 감안한다면, 이상의 소비자-생산자 간 불균형 관계는 자본주의의 중심부-주변부 관계라고 할 수 있다.

기억

구호와 복구로 재난이 끝난 것은 아니다. 재난은 전쟁이나 국가 폭력 등 직접적 폭력이 남기는 것과 유사한 기억의 상처를 남긴다. 따라서 구호와 복구 이후에도 재난은 현재 진행형이다. 외상 후 스트레스 증후군

(PTSD)은 이라크전이나 아프간전에 참여한 미군만의 이야기가 아니다. 이 같은 정신적 장애는 4·16 세월호 사고 후 유가족, 생존 학생들은 물론 일반 시민들에게서도 발견되는데, 이는 참사로 인한 형언하기 힘든 정신적 상처가 개인적 또는 집단적 기억으로 남아 있기 때문이다.

후쿠시마 사고의 피해자 중에서도 많은 이들이 방사능 피해와 강제적 이주(피난)의 폐해뿐만 아니라 상황 부적응에 따른 외상 후 스트레스 증후군을 겪고 있는 것으로 드러났다. 비교적 풍요롭고 안정된 복지 국가에서 살아온 이들은 원전 사고로 인해 일생 겪어 보기 힘든 정신적 충격을 받았을 것이다. 이들은 태평양 전쟁 시기 미일 간의 치열한 전투 속에서 일본군에 의해 집단 자살을 강요당한 적이 있던 오키나와 주민들 사이에서 나타났던 것과 동일한 정신적 장애를 보인다고 한다.⁵ 생존한 이들의 정신적 장애는 생활 자체를 파괴시켜 간다.

재난의 기억이 정신적 장애를 가져오기도 하는 한편, 지구화 시대에 재난의 이미지가 일상화·상업화되어 전 세계적으로 유통, 소비되는 현상을 보이기도 한다. 재난의 폐허가 환상의 재료로 활용되어 인류의 종말과 같은 파국을 재현하기도 한다. 체르노빌 사고 후 20년이 지나 ‘스탈케르’라는 게임이 핵 재앙의 현실과 허구를 넘나드는 이미지를 재현했다. 그런데 후쿠시마 원전 사고가 있는 지 넉 달 만에 핵전쟁 이후를 배경으로 하는 ‘폴아웃’의 후쿠시마 버전이 인터넷을 통해 등장했다. 후자는 곧 퇴출되기는 했지만, 디지털화에 따른 재난 이미지의 재현과 소비가 더욱 가속화되어 가고 있음을 알 수 있다(이문영).

재난의 기억에도 정치가 작용한다. 정치에 의해 기억이 채색되기도 하고

5 사사키 다케시와의 인터뷰, 2014년 6월 23일. 사사키는 『원전의 재앙 속에 살다』(2013)의 저자로서, 후쿠시마 원전으로부터 20km 북쪽에 위치한 미나미소마에 거주하고 있다.

새롭게 구성되기도 한다. 스리랑카 정부가 2009년 타밀 토벌 작전 이후 공개한 2004년 쓰나미 피해에 관한 통계에는 정부의 의도가 숨겨져 있었다. 3만 5320명 사망, 2만 1000명 부상 등 숫자는 지역별, 인종 집단별로 구분되어 있지 않았다. 이를 밝히지 않은 통계는 재난에 대한 기억을 일반적으로 유도하려는 정치적 의도가 깔려 있었다. 피해의 규모 못지않게 피해의 구분도 중요한 이유는 차별과 배제에 대한 사실을 밝혀야 하기 때문이다(주드 랄 페르난도).

재난의 기억이 정치에 의해 적극적으로 구성되기도 한다. 스리랑카의 쓰나미에 관한 기억이 은폐라는 소극적인 방식에 의존한 반면, 중국의 탕산 지진에 관한 기억은 의도적 구축이라는 적극적 방식을 취했다. 2008년 쓰촨 지진 이후 탕산 지진을 배경으로 제작된 영화 「대지진」(2010년)은 쓰촨에 관해 위로받고 싶은 중국인들의 심리와 민족주의를 교묘하게 결합하였으며 이 때문에 큰 흥행을 이루었다(백지운). 정치 이념 성격의 민족주의는 일종의 피해자 심리를 영웅과 영웅주의로 감추거나 대체한다. 이 같은 탕산의 기억 구성은 쓰촨의 아픈 기억을 상쇄시켰을 것이다.

세월호를 기억하는 데도 이념과 정치 세력들이 개입하고 있다. 무사 귀환, 사회적 성찰을 상징하는 노란 리본을 둘러싸고도 갈등이 조장되고 투쟁이 발생하고 있다. 남북한 관계를 보는 보수와 진보의 갈등이 세월호에 대한 기억을 둘러싸고도 재현된다는 우려를 지울 수 없다.

이상에서 살펴본 재난의 과정을 깔때기에 비유할 수 있다. 넓은 부분으로부터 점점 좁은 부분까지(기원, 예견, 콘텍스트, 복구와 대응, 기억까지)를 통과하면서 재난이 발생하고 복합화되어 간다. 이 사이클은 되풀이된다. 기원과 예견은 재난 발생의 심연(深淵)이어서, 그 부분을 인간이 제어하고

통제하기란 쉬운 일이 아니다. 과학 기술 문명이 이미 그 같은 배경을 만들어 놓은 셈이기 때문이다. 자연 재해로 보이는 것도 문명과 무관하지 않으며 사회적 배경을 가지고 있다. 문명과 사회적 배경이 역설적으로 정상 사고인 재난 발생의 불가피성을 제공한다. 인간이 문명과 사회에 대한 깊은 성찰을 해야만 하는 부분이다.

갈때기의 좁은 부분인 콘텍스트, 복구와 대응, 기억은 상대적으로 덜 근원적인 과정이라고 할 수 있다. 관행, 사고의 무능력, 방치, 망각 등의 콘텍스트는 사회 안에 존재하며, 대응과 복구, 기억에는 정치가 개입한다. 그 어느 것도 교정하거나 제어하기가 쉽지 않다. 따라서 위험에 대한 인지 능력과 도덕성을 회복시켜 재난을 통제하고 극렬한 사회적 갈등을 막는 것이 중요한 과제이다. 인지 능력의 제고는 무엇이 위험하고 위험하지 않은가를 분석적으로 파악하는 데 도움을 주는 한편, 도덕성 회복은 타자의 호소를 듣고 현장 중심의 책임주의를 바탕으로 거버넌스를 구축하는 데 기여할 것이다. 이것이 재난에 맞서는 노력의 시작이다. 그리고 평화를 구현하는 중요한 과정의 출발이기도 하다.